



보도 일시	2022. 1. 13.(목) 10:00	배포 일시	2022. 1. 13.(목) 8:00
담당 부서 <총괄>	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	책임자	과장 박철건 (044-215-5740)
		담당자	사무관 김영웅 (ssuper84@korea.kr)
		담당자	사무관 김선영 (ksunny3@korea.kr)

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」 2022년 1월호(21.11월 말 기준)

- ◇ 국세·기금수입·재정수지 모두 개선세 지속
- ◇ '21년 국고채 발행은 계획 대비 5.8조원 축소

□ **(총수입, 523.9조원)** 국세·세외·기금 수입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유지되어 진도율 100% 초과(진도율 101.8%)

① (국세, 323.4조원) 주로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세, 부가가치세, 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하여 진도율 102.9%

-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진도율이 각각 104.9%, 101.3%(전년동기대비 +7.5%p, +2.5%p)

*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(조원, 개별기준): ('19) 56.3 → ('20) 67.5 <+19.8%>
(20.상) 29.6 → ('21.상) 50.1 <+69.1%>

** 민간소비(전년비): ('21.1분기) +1.3%, (2분기) +3.6%, (3분기) +3.2%
수입액(역불): ('20.1~10)3,830 → ('21.1~10)4,964 <+29.6%>

- 자산시장 영향,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양도·근로 등 소득세의 진도율이 107.2%(전년동기대비 +14.4%p)

* 상용근로자(월평균, 만명): ('19.12~'20.10)1,452 → ('20.12~'21.10)1,481 <+2.0%>
명목임금(월평균, 천원): ('19.12~'20.10)3,537 → ('20.12~'21.10)3,685 <+4.2%>

② (세외수입, 26.0조원)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* 증가(+0.9조원)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.7조원 증가하였으며 진도율 88.6% 수준

*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률(%) : ('20.11) 3.49 → ('21.11) 4.55(+1.06%p)

○ 대기기업의 부당내부 거래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수입(+0.4조원) 및 양곡 판매 수입(+0.2조원) 등 증가

③ (기금수입, 174.5조원)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, 사회보장성 기금 자산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진도율 100% 초과(진도율 102.1%)

○ 고용 회복 등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 사회보험료 수입 대폭 증가(68.1 → 71.5조원, +3.4조원)

- 특히, 수출호조와 비대면 수요 증가 ·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제조업·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*

*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(만명) : ('20.11) 353.5 → ('21.11) 362.7(+9.2)

*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(만명) : ('20.11) 989.6 → ('21.11) 1,010.6(+21)

*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(만명) : ('20.11) 1429.9 → ('21.11) 1463.3(+33.4)

○ 국민연금(+19.0조원)*·사학연금(+1.3조원)·산재보험(+0.9조원) 등 사회보장성 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수익 증가(+21.4조원)

*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(%) : ('20.10) 2.03 → ('21.10) **7.63(+5.6%p)**

* 국민연금기금 적립금(누계, 조원) : ('20.10) 772.2 → ('21.10) **917.8(+145.6)**

(단위: 조원, %, %p)

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 대비			
	추경 (A)	결산 (B)	11월 (C)	11월 (누계D)	진도율		2차 추경 (G)	11월 (H)	11월 (누계I)	진도율 (J=I/G)	11월 (H-C)	누계 (I-D)	진도율	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		예산 (J-E)	결산 (J-F)
□ 총수입	470.7	478.8	28.2	437.8	93.0	91.4	514.6	34.0	523.9	101.8	5.8	86.1	8.8	10.4
◇ 국세수입	279.7	285.5	14.0	267.8	95.7	93.8	314.3	16.0	323.4	102.9	1.9	55.6	7.2	9.1
○ 일반회계	271.9	276.3	13.6	259.8	95.5	94.0	304.6	15.4	313.4	102.9	1.9	53.6	7.3	8.9
- 소득세	88.5	93.1	10.9	86.5	97.7	92.8	99.5	10.3	106.6	107.2	△0.6	20.2	9.5	14.4
- 법인세	58.5	55.5	1.2	54.1	92.4	97.4	65.5	1.5	68.8	104.9	0.3	14.7	12.5	7.5
- 부가가치세	64.6	64.9	△1.9	64.1	99.3	98.8	69.3	△1.6	70.3	101.3	0.3	6.1	2.0	2.5
- 교통세	15.5	13.9	△0.0	12.6	81.6	90.5	15.7	1.3	15.6	99.3	1.3	3.0	17.7	8.8
- 관세	7.7	7.1	0.6	6.4	83.3	91.0	8.3	0.6	7.6	90.5	0.0	1.1	7.3	△0.5
- 기타	37.2	41.8	2.8	36.1	97.1	86.4	46.2	3.4	44.6	96.4	0.5	8.5	△0.7	10.0
○ 특별회계	7.8	9.3	0.5	8.0	102.7	86.8	9.6	0.5	10.0	103.7	0.1	2.0	1.0	16.9
◇ 세외수입	29.1	26.9	1.6	23.3	79.9	86.4	29.3	2.1	26.0	88.6	0.5	2.7	8.7	2.3
◇ 기금수입 (사보기금*)	161.9	166.2	12.6	146.7	90.6	88.3	171.0	15.9	174.5	102.1	3.3	27.8	11.4	13.8
	95.8	100.0	8.2	89.6	93.6	89.7	99.5	11.5	114.1	114.7	3.2	24.5	21.1	25.1

* 국민연금기금,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, 고용보험기금,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

□ (총지출, 546.3조원) 경기회복 견인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전년동기대비 +45.2조원 증가(진도율 90.3%)

○ 12월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, 고용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지원을 중심으로 적극 집행되어 연말기준 총지출은 11월(누계)대비 +56.4조원(추정치) 전망

(단위: 조원, %, %p)

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대비		
	추경 (A)	결산 (B)	11월 (당월 C)	11월 (누계 D)	진도율		2차추경 (G)	11월 (당월 H)	11월 (누계 I)	진도율 (J=I/G)	증감		진도율 (J-E)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11월 (H-C)	누계 (I-D)	
◇ 총지출	554.7	549.9	32.6	501.1	90.3	91.1	604.9	37.1	546.3	90.3	4.5	45.2	△0.0
○ 예산	377.5	374.4	20.4	347.9	92.2	92.9	409.7	22.7	368.7	90.0	2.3	20.9	△2.2
- 일반회계	323.5	320.8	17.6	299.0	92.4	93.2	348.8	19.6	314.6	90.2	1.9	15.6	△2.2
- 특별회계	54.0	53.6	2.8	48.8	90.5	91.1	60.9	3.1	54.1	88.8	0.3	5.3	△1.7
○ 기금	177.3	175.2	12.1	153.0	86.3	87.4	195.2	14.4	175.2	89.8	2.3	22.2	3.4
(사회보장성기금)	61.2	59.1	4.8	54.6	89.3	92.3	63.2	5.1	59.5	94.1	0.3	4.9	4.8
○ 세입세출외*	-	0.4	0.0	0.2	-	39.4	-	-	2.4	-	△0.0	2.2	-

*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

< 주요 재정사업 집행 실적 >

□ ①코로나 피해지원, ②방역대응체계, ③고용유지·고용안전망 강화 적극 지원

①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층적 지원 강화

-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'21.3/4분기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은 '21.10.27일 지급 개시하여 '21.12월말까지 60.9만개사에 1.8조원 지급 완료

※ 공연·예술 분야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해서도 '21.12월말까지 2.7만명 인력채용을 지원(0.2조원), 매출회복지원을 위해 스포츠 및 영화 관람 등 문화 소비쿠폰 254억원 지급

- '21.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 55만개사의 '21.4/4분기, '22.1/4분기 손실에 대해 '22.1.19일부터 업체당 500만원 선지급 개시, 설연휴 전까지 신청업체 대부분에 지급되도록 추진

- 매출이 감소한 320만개사를 대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'21.12.27일 지급 개시, '22.1.7일까지 1차 대상 70만개사 중 68만개사에 신속 지급(0.7조원)

※ '22.1.6일부터 2차 지급을 시작하여 '22.1.7일까지 150만개사에 1.5조원 지급

-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용자(2조원)는 '22.1.10일까지('21.12월 중순~) 신청된 3.4만건 중 1.6만건에 대해 0.3조원 지원

②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대응체계 안정을 위한 적극 지원

- '21.12월말까지 전국 369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지급(2.9조원), 재택치료 관리 등을 위해 의료종사자 및 행정인력 등 전국 258개 보건소 대응인력 인건비 지원(223억원)

③ 고용유지·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집행 노력 지속

- '21.11월말까지 직접일자리 사업(3.2조원)은 3.1조원(99.3%) 교부, 2.7조원(85.9%) 지급, '22.1월 중 직접일자리 60만명 이상(연간 목표의 57% 수준) 조기채용 추진 예정

- 구직급여*(11.3조원)는 '21.11월말까지 53.7만명에 대해 11.3조원 집행(100%**)

* 구직급여 수급자(만명) ('21.4)73.9 (5)70.4 (6)69.3 (7)67.9 (8)64.7 (9)61.2 (10)56.5 (11)53.7

** '21.12월분 지급소요는 고보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원(1.3조원)

□ **(재정수지)** 국세·기금수입 등 총수입 개선세 유지로 11월 기준 통합 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40.9조원 개선(△63.3→△22.4조원)

- 11개월 연속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, 현 개선세 유지 시 연말기준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(△90.3조원)보다 크게 축소 전망

(단위: 조원, %, %p)

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대비		
	추경 (A)	결산 (B)	11월 (당월 C)	11월 (누계 D)	진도율		2차 추경 (G)	11월 (당월 H)	11월 (누계 I)	진도율 (J=I/G)	증감		진도율 (J-E)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11월 (H-C)	누계 (I-D)	
◇ 총수입(A)	470.7	478.8	28.2	437.8	93.0	91.4	514.6	34.0	523.9	101.8	5.8	86.1	8.8
◇ 총지출(B)	554.7	549.9	32.6	501.1	90.3	91.1	604.9	37.1	546.3	90.3	4.5	45.2	△0.0
◇ 통합재정수지 (C=A-B)	△84.0	△71.2	△4.3	△63.3			△90.3	△3.0	△22.4		1.3	40.9	
◇ 사회보장성 기금수지(D)	34.6	40.8	3.4	35.0			36.2	6.4	54.6		2.9	19.6	
◇ 관리재정수지 (E=C-D)	△118.6	△112.0	△7.7	△98.3			△126.6	△9.4	△77.0		△1.7	21.3	

□ **(국가채무)**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월말 기준 180.5조원
(발행한도 186.3조원의 △5.8조원 미발행)

※ 12월 중앙정부 채무(잠정치) : 939.1조원(국고채 843.7, 주택채 82.2, 외평채 11.2 등)

- 12월 국고채 응찰률은 연말 북클로징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(11월 291% → 12월 277%) 하였으나, 시장안정 등에 힘입어 조달금리가 하락(11월 2.26% → 12월 2.10%)하는 등 안정적으로 발행량 소화

* 국고채 조달금리(%) : ('16~'19 평균)1.96 ('20년 평균)1.38 ('21년 평균)1.79

- 특히,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*는 연중 내내 유입되며 연간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인 42.5조원 기록

* 外人 원화채 순투자(조원): ('18)+15.4 ('19) +9.7 ('20)+26.5 ('21)+63.9<역대 최대>

外人 국고채 순투자(조원): ('18) +8.4 ('19)+12.0 ('20)+23.3 ('21)+42.5<역대 최대>

外人 국고채 보유잔액/비중(조원 % 기말): ('19)98.3/16.1 ('20)121.6/16.7 ('21)164.1/19.4<역대 최대>

- 12월 국고채 금리는 12월 국고채 발행량 축소 등에 힘입어 안정세 유지

* 국고채 10년물(기말, %) : ('21.9말)2.237 (10월) 2.575 (11월) 2.213 (12월) 2.249

국고채 관련 주요 통계

(조원, %)		'20년말	'21년				
			12월말	9월	10월	11월	12월
발행잔액		726.8	843.7	831.7	841.9	848.1	843.7
발행액		174.5	180.5	11.5	12.8	10.4	5.8
평균 조달금리*		1.38	1.79	1.82	2.18	2.26	2.10
응찰률(%)		295%	283%	283%	278%	291%	277%
외국인 국고채	보유잔액 (순투자)	121.6 (+23.3)	164.1 (+42.5)	(+3.0)	(+2.3)	(+2.6)	(+4.6)
	보유비중(%)	16.7%	19.4%	18.6%	18.7%	18.8%	19.4%

* '20년말, '21.12월말의 경우 각각 '20년, '21.1~12월 평균 조달금리, 그 외 월평균 조달금리

□ 안도걸 2차관은 최근 재정동향의 특징, '21년 재정운용 성과 및 '22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

① 코로나 충격 속에서 범정부가 합심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 (중앙재정 600.3조원 전년대비 +50.8조원)*으로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 흐름**에 기여

* 집행규모/전년비(조원)(추정치) : (중앙)600.3/+50.8 (지방)468.0/+36.0 (지방교육)83.7/+6.1

** G20 선진국 '20~'21년 평균 성장률(%) : 한국 1.5 (미국) 1.0 (호주) 0.6 (일본) △1.4 (OECD 평균 0.2)

② 확장재정이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및 세수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11월말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전년동기대비 64% 축소 →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

③ '21년 국고채 발행은 초과세수 활용 등을 통해 '21년 국고채 발행한도(186.3조원) 대비 5.8조원* 축소

* ① 초과세수를 활용한 발행물량 축소(△2.5조원) + ② 시장조성용 차환 발행물량 축소(△3.3조원)

-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33개월 연속으로 유입되며 연간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2.5조원 기록

④ 금년에도 완전한 경제 정상복귀 및 민생안정 조기 실현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지속하며 상반기 중 63% 조기집행 추진

- 지자체,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정부 조기집행 목표에 맞춰 상반기 각각 60.5%, 64.0%씩 조기집행 추진

⑤ 금년 재정투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층적 지원 등 민생안정과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집중

-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손실보상, 방역지원 등 중층적 지원에 총력
- 손실보상 비대사업종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해 '22.1.3일부터 1.4조원 규모의 1% 초저금리 희망대출 신청을 시작하였으며
- '22.1.19일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의 '21.4/4분기, '22.1/4분기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설연휴 전까지 신청업체 대부분에 지급할 예정
- 경제·사회구조 대전환과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, 탄소중립 재정투자,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을 핵심사업군*으로 선정하여 연초부터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
- * 선도형 기반구축을 위한 핵심사업군 투자규모 : 한국판뉴딜(33.1조원), 탄소중립 재정투자(11.4조원),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(1.2조원)

<붙임>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2년 1월호(배포용)



담당 부서 <총괄>	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	책임자	과 장 박철건 (044-215-5740)
		담당자	사무관 김영웅 (ssuper84@korea.kr)
		담당자	사무관 김선영 (ksunny3@korea.kr)
	세제실 조세분석과	책임자	과장 최영전 (044-215-4120)
		담당자	사무관 박병선 (ghibli80@korea.kr)
	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	책임자	과장 김완수 (044-215-5330)
		담당자	사무관 김경중 (rudwnd@korea.kr)
	국고국 국채과	책임자	과장 김이한 (044-215-5130)
		담당자	사무관 최시훈 (choisihoon@korea.kr)

참고

1월호 주요재정이슈 요약

※ 기고문을 자체 요약한 자료이며, 전체본은 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」(붙임)에 게재

① 전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(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혜원 선임연구위원)

- (현황) 플랫폼 노동 등 근로형태 다양화,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라 '평생직장' 개념이 약화되고, 평생직업 능력개발의 중요성 증대
 - 그간 근로자 중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훈련과정 제공에서 전 국민 평생 직업 능력개발 지원으로 정책전환*
 - * 직업능력 개발 지원범위를 '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훈련'에서 '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무능력 습득·향상훈련'으로 확대(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개정(22.2월 시행))
 - (주요내용) 직업능력개발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, 디지털·저탄소 등 새로운 훈련수요에 부합하는 훈련 체계 마련 등
 - ①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대학생 등으로 확대, 플랫폼 종사자·자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형 훈련 과정 신설·확대
 - ②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훈련과정과 함께 디지털 기초역량 등 포괄적 직업, 직무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도 지원
 - ③ 코로나 19 지속,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, 산업전환 재직자 등의 이·전직을 위한 맞춤형 훈련 제공
- (정책제언) 프로그램 내용 및 훈련·교육 전달방식의 일부 보완 필요
 - 현행 국민내일배움카드제를 적극 활용, 연령별·세대별 특성*을 반영한 개별화된 맞춤형 전달방식으로 개편 필요
 - * 기존 디지털·신기술 훈련의 경우,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되어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중장년층에 어려움 有
 - 직무 관련성을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는 등 포괄적 직업 훈련 지원을 위해 다양한 훈련 수요 발굴 필요
 - 기업직업훈련바우처*의 경우 중소기업이 실시하기 어려운 연수 및 외국어 과정, 실습·체험형 밀착 교육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 필요
 - * 정부지원 훈련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직자 훈련 지원

② 주요국의 R&D 재정투자 동향(조세연 재정지출분석센터)

- (주요국 동향) 미·중 기술패권 경쟁 격화, AI·감염병·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 R&D 재정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
 - 최근 5년간 중국은 연평균 10%, 미국은 연평균 6% 규모로 R&D 재정투자 확대, '13~'16년 정체되었던 영국도 '17년 이후 투자 확대 중
- (중장기 투자방향) AI, 바이오(감염병, 유전자 정보 분석 등), 에너지·환경(기후변화 대응, 미래차 등), 항공·우주 분야 등에 중점 투자
 - ① (미국) American Jobs Plan('21.3월)에 기후 과학 혁신 지원, 대학 R&D 지원 등 2022~2030년(1,800억달러 규모) R&D 장기 투자계획을 포함
 - * 의회 심의 과정에서 축소 통과('21.11)되었으나, 원안에 준하는 R&D 재정투자 계획을 재추진 할 것으로 예상
 - ② (영국) AI 10개년 전략('21.9)을 통해 ①AI 생태계 변화를 반영한 장기적 투자, ②AI 전분야 확산, ③효과적인 AI 거버넌스 구축 추진
 - AI 인재 양성, 연구개발 및 투자 지원, 보건 분야 등 AI를 활용한 사회의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, AI 국제 표준 설정 적극 주도
 - ③ (중국) 제14차 5개년(2021-2025년) 계획('21.3)을 통해 기술자립과 내수확대 등 자립경제 구축을 위한 기술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
 - 7대 핵심기술(AI, 양자정보, 반도체, 뇌과학, 바이오, 임상의학, 우주) 및 8대 신흥산업(신소재, 로봇, 스마트카, 첨단의료 등) 중점 지원
 - 기초연구 투자확대('21년 10.6% 증액),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위한 제도 개선, 전염병 방역 및 공중위생 분야의 국제 기술 협력 추진
- (시사점) 주요국의 R&D 투자의 확장기조 및 중점 투자분야는 세계 1위의 R&D 재정투자 국가인 우리나라와 정책방향이 유사
 - * GDP 대비 R&D 재정투자 비중(%) : (한국) 1.0~1.5 (미국) 0.6~0.8 (중국) 1% 내외
 - 코로나 이후 가속화될 산업·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, 중장기 R&D 투자전략(2023-2027)* 및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시 주요국 투자동향에 대한 면밀한 평가 반영 필요
 - * 탄소중립, 양자기술, 뇌연구, 미래차, 국제협력, 우주, 기초연구, 디지털기술 등 포함

3 급변하는 가족형태에 대응한 보편적 가족서비스 추진방향 (여성가족부 김권영 가족정책관)

□ (현황) 1인 가구 증가* 등 가족개념 변화**로 혼인과 혈연 중심의 관점에서 형성되고 유지되어온 현행법과 제도는 한계有

* 1인가구 증가('10년 23.9% → '20년 31.7%),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던 '부부와 미혼자녀' 가구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('10년 37.0% → '20년 29.8%),

** 혼인·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'가족'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68.5%(2020년)로 가족의 다양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

○ 가족 형태 다양화,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 증진 등을 반영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('21~'25)('21.4) 수립

-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법률상 용어 개선, 가족의 정의 및 범위 규정 개정 추진* 중

*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반영한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상의 '혼인 중의 자', '혼인 외의 자' 등 개정, 혼인·혈연·입양 이외 다양한 가족을 포괄한 가족개념 포함

- 부성우선주의에 따른 자녀의 성(姓) 결정 → 부모가 협의하여 부모 또는 모의 성(姓)을 따를 수 있도록 개선 추진

□ ('22년 추진내용) 1인 가구·한부모·청소년부모·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지원 확대

○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 극복을 위한 소득·돌봄·주거·안전·사회적 관계·소비 분야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

○ 부모의 혼인 여부, 가족형태 등에 따라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부모·다문화 가족의 아동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*

*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% 공제하여 적용, 청소년부모에 대해 자녀 양육비 및 상담·법률,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90% 지원 추진

○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에 대한 청소년 전문 상담가의 가정 내 갈등, 진로·취업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사회 적응 지원 강화